

고흥군, 땅 부정 매입 후 저가에 팔아

감사원, 사기·업무상배임 등 혐의 수사요청 전 A과장, 동창에 공유재산 파는 등 특혜 제공

고흥군이 민간 콘도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소유자들을 속여 토지를 매입하고, 이 토지를 콘도 사업자에게 저가에 팔아넘긴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을 사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고흥군 전 A과장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던 폐교를 중학교 동창에게 민간숙박시설 용도로 매매계약하는 특혜를 제공해 검찰에 넘겨졌다.

감사원은 고흥군·여수시·신안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V' 감사를 실시해 △변상관정 1건(3억6000만원) △징계 12건(20명) △인사자료 통보 1건(1명) △수사요청 2건(6명) 등 총 3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흥군은 고흥만 일대 토지 14만여㎡에 국비 100억원을 들여 천연해수욕장·박물관 등을 포함한 노을공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2016년 D업체에 공인 내지상 10층 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 건축을 허가하는 등 민간 콘도시설 유치사업을 진행했다.

고흥군은 이 과정에서 민간 콘도시설 설치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닌데도 콘도부지가 공익사업인 노을공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해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 이 부지를 취득했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토지 취득이 지연되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외에 보상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예산을 이용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3억 6000여만원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고흥군은 콘도부지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15억5000만원 대비 6억6000만원 저렴한 8억9000만원에 D업체에 매각했다. 또 콘도부지 매각을 지방경쟁입찰로 진행하면서 D업체로부터 소개 받은 들러리 업체를 지정경쟁 대상

자로 지정, 2개 업체 간 경쟁계약인 것처럼 위장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수변공원 조성 목적의 국고보조금 13억8000만여원을 콘도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와 콘도부지 취득비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고흥군은 이용률이 낮은 다른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직원 선호도나 수요에 대한 조사 없이 기존에 보유한 콘도회원권 가격 2억6000만원의 2.4배인 4억 9800만원에 D업체로부터 콘도회원권을 구입해 사실상 자금지원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고흥군수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강등, 정직 등 징계와 주의요구하고 사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허위의 보상금을 지급한 관련자 3명에게 3억6000만여원을 고흥군에 변상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흥군이 국고보조금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13억 8000만여원에 대해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반환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흥군 전 A과장은 공유재산(폐교) 대부 및 매각업무 처리 과정에서 중학교 동창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고흥군은 2011년 전남도고흥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교인 7중학교 분교장과 2초등학교를 공익사업인 농촌종합개발사업 용도로 매입해 2017년 민간에 대부 및 매각하기 전까지 공유재산(일반재산)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2016년 A과장의 중학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B조합법인이 7중학교 분교장을 강당, 식당, 특산물판매전시관 등을 포함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대부계약 등

을 신청한 데 대해 공익과 무관한 민간 숙박시설 용도의 계약은 승인이 불가하다는 고흥교육지원청의 협의 의견을 통보받고도 수의계약으로 B조합법인에게 매수청구권까지 부여하는 사실상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고흥군은 공유재산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2초등학교 부지를 2017년 D업체가 연회장, 식당,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겠다고하자 교육지원청 승인 없이 넘기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유재산인 폐교를 부당하게 대부·매각한 A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요청하고, 전남도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고흥군수와 체결한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에 따라 폐교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 또는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폐교가 공익 목적으로 정당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광주교육청, 고졸 채용 5년 평균 1.5%

최근 5년여 동안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고졸 채용비율이 각각 1.5%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고졸 채용 현황' 및 '최근 5년간 인사채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2.5%다.

광주의 경우 2015년 1.4%, 2016년 1.4%, 2017년 2.8%, 2018년 2.4%, 2019년 0.7%로 5년 평균 1.5%를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고졸 채용인원 모집 현황은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2명, 2019년 1명이었다.

전남은 2015년 3%, 2016년 4.5%, 2017년 3.7%, 2018년 3.1%, 2019년 3.2% 등 5년 평균 3.4%로 나타났다.



이슈 판결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버스 치여 사망...法 "업무상 재해"

"저녁식사와 회사업무 사이 밀접한 연관성 있어"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술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0일 야근을 하다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됐고 1·2차 자리를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운행 중인 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했다.

공단은 저녁식사가 사업주가 관리하는 회식이 아닌 데다 A씨가 가끔해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도로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을 달리하고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이 사

건 저녁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회사의 임원으로 1차 저녁식사도 임원이 회사 법인카드를 결제한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저녁식사를 마친 뒤 복귀해 일을 계속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저녁식사와 회사의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외출한 A씨는 저녁식사를 마친 뒤 사무실을 돌아왔다가 다시 귀갓길에 올랐고 이후 사고를 당했다.

사건 당일 A씨를 포함한 저녁식사 참석자들은 출장을 함께 다녀온 다음 회사로 복귀해 출장 내용을 회의를 하다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세 사람이 다시 일을 하려고 했는데도 저녁식사에서 술을 나눠 마시기까지 한 점을 보면 저녁식사는 격려 차원의 성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의 만류나 제지에도 혼자서 많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석자들이 많은 양의 술을 비슷하게 나눠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항공방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헬기가 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 및 대곶면 일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 항공방제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 과속 단속 1위' 나주초 후문...2만여건 적발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과속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나주 초등학교 후문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6월 기준 지방청별 과속 단속 상위 5개소'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나주 초등학교 후문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나주초 후문에서는 총 2만357건

이 과속으로 적발됐고, 이어 여수 웅천생태터널 앞 1만1428건, 구례 토지초등학교 앞 7854건이었다.

나주 문평면 안곡리의 한 도로에서 6781건, 나주시 영산포초등학교 앞에서 5579건이 적발됐다.

광주의 과속단속 적발 건수는 '광산구 무진로(무안방면)'가 68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5513건, 구송안로 SK아파트 앞 4555건, 쌍촌동 버들주공

아파트 사거리 4295건, 북구 과학기술원 후문 입구 4025건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에서 제출한 과속 상위 85곳 중 22곳이 초등학교 인근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공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사결과, 자태치로 공인 인허군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